

統一情勢分析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2002. 11

신상진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 일 연 구 원

<요 약>

1. 지도부 세대교체 단행

○ 장쩌민, 리펑, 주룽지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물러나고 후진타오, 우방궈, 원자바오, 쩡칭훙 등 60대 전후 세대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되어 향후 중국을 영도해 나갈 핵심 지도부를 형성하였음.

○ 그러나 쟡쩌민이 당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기로 하고 쩡칭훙 등 자신의 계파 인사들을 정치국 상무위에 대거 승진시켰는 바, 후진타오가 명실상부한 4세대 영도 핵심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됨.

○ 당 중앙위 정위원회에 발탁된 인민해방군 간부가 40명에서 44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부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후진타오 지도부를 순항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됨.

2. 대내정책 전망

○ 중국공산당은 2020년까지 국내생산총액을 2000년 대비 4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중국을 ‘전면적 소강단계’로 발전시

킨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는 바, 중국의 신지도부는 경제개혁·개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 할 것임.

○ 노동자와 농민 이외에 민간 자본가와 지식인 등도 중국공산당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 규약을 수정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정당에서 전 중국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권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음.

○ 후진타오 지도부는 충실한 공산주의자들이며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시기 청년기를 보낸 세대들이기 때문에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체제 내에서의 정치개혁을 시도할 것임.

○ 당대회 정치공작보고에서 “부패문제를 척결하지 못하면 중국공산당은 자멸할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당·정 간부와 부유층에 대한 비리척결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3. 대외정책 전망

○ 후진타오 지도부는 부패문제, 실업문제, 빈부격차문제 등 대내적으로 산적한 현안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내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평화지향적인 정책 노선을 지속할 것임.

- 기술관료들은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기초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후진타오 지도부는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대외문제 전문가들과 외교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정책실무 부서의 정책건의를 더욱 중시할 것임.
- 중국 신지도부가 문화대혁명과 천안문사건 등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은 과격한 정책보다는 점진적·합리적·정상적인 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진입한 외교담당 인사들 중 탕자 쉐 현 외교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통이라는 점은 향후 중국이 대미정책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신지도부는 미국이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단계 중국의 최대 목표를 대내 경제발전에 두고 있으므로 가능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임.
- 중국은 미국과 반테러 협력, 군사교류 회복,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영향력 행사, 최고 지도부 교환방문 등을 통해 9·11테러 이후의 미국과의 관계개선 추세를 유지시키려 할 것임.

4. 한반도정책 전망

- 장쩌민이 외교안보문제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한과도 안보관계 확대를 추구하는 등거리정책을 채택하고, 한국과 경제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할 것임.
- 그러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전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공산당에 입당한 간부이며, 한국전에 참전한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실적 국익을 중시하고 사회주의적 연대관계를 덜 중시할 것임.
- 중국의 신지도부는 북한이 중국의 대미관계 개선과 대내 발전 및 안정유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대미, 대일, 대남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있다고 간주할 것임.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국, 대남한, 대일본 관계에서 협상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5. 정책 고려사항

○중국이 2020년까지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경제력을 증강시킨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바, 중국의 발전에 대한 한국의 장기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중·북관계의 소원화가 한국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장쩌민과 첸치첸 등 기존 중앙외사영도소조 멤버가 중국의 대북 정책 등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중국의 신지도부와 접촉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원로 정치인과의 교류를 유지해야 함.

○티벳 당서기를 역임한 후진타오가 조선족문제 등 소수민족정책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는 바, 조선족문제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신중

한 입장이 요구됨.

- 김정일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중국채널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강화해야 함.
-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외교실무 부서와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당·정 연구기관의 정책건의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보이므로, 외교 실무자와 접촉을 강화하고 당·정 연구기관과 국내 국책연구기관간의 교류·협력도 확대해야 함.
- 정치국원으로 승진한 우의가 2003년 3월 중국의 외교담당 부총리에 지명될 것으로 보여 한국에 대해 무역역조 시정요구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의 불가피성에도 사전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목 차 -

I. 문제제기	1
II. 중국공산당 지도부 인사개편	3
1. 세대교체 단행	3
2. 집단지도체제 강화	5
3. 장쩌민의 영향력 지속	7
4. 군 지도부의 중앙진출 확대	10
III. 중국의 대내정책 전망	11
1. 개혁·개방정책 가속화	11
2. 중국공산당의 성격 변화 모색	13
3.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도모	14
4. 부정부패 척결 노력 강화	15
IV.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19
1. 후진타오 지도부의 대외정책 성향	19
2. 대미정책	21
3. 대대만정책	24

V.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중·북관계 전망	26
1. 후진타오 지도부의 한반도정책 기조	26
2.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 전망	26
VI. 한국의 정책 고려사항	33

I. 문제제기

- 중국공산당은 제16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11.8~14)와 16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6기 1중전회)를 개최(11.15), 당 중앙 정치공작보고와 기율검사위 공작보고를 청취·심의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나갈 당 총서기·정치국원·서기처 서기·중앙위원·중앙기율검사위원·중앙군사위원 등 최고 지도부를 재편하였음.

- 2,114명의 당대표가 참가한 16차 당대회에서는 자본가를 공산당원으로 충원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개 대표론」을 당 규약에 삽입하였음.
 - 「3개 대표론」은 장쩌민(江澤民)이 2000년 2월 광둥성 시찰시 최초로 제기한 것으로 200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7·1강화’에서 재강조되고, 15기 6중전회(2001.9)에서 다시 당의 지도이념으로 삽입하기로 합의된 것임.

- 16차 당 대회 폐막 직후 개최된 16기 1중전회에서는 당 총서기·정치국상무위원·정치국원·서기처 서기·중앙군사위원·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등 최고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였음.
 - 후진타오를 제외하고 장쩌민,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리루이환(李瑞環), 웨이젠싱(尉健行), 리란칭(李嵐清) 등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¹⁾ 60세 전후

의 제4세대 지도자들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하였음.

○이번에 선출된 중국공산당 핵심 간부들은 2003년 3월 10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외교담당 부총리, 국방부장 등으로도 발탁될 예정으로 있는 바, 금번 당 지도부 개편은 중국의 대한 반도정책 등 대내외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금번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결정된 지도부 인사개편 내용과 특징 그리고 정치공작보고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방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 변화방향을 전망하는 동시에 중국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정책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1) 1997년 15차 당 대회시 중국 지도부는 70세 이상의 지도자들은 정치국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음. 이러한 합의에 따라 당시 장쩌민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차오스(喬石)도 순순히 은퇴하였음. 2001년 8월 북대하회의에서도 16차 당대회시 70세 이상 당 지도부 완전 퇴진에 합의하였음.

Ⅱ. 중국공산당 지도부 인사개편

○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최고 핵심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비롯, 정치국과 중앙서기처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는 바, 이번 중국의 신지도부 인사개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1. 세대교체 단행

○ 금번 당대회에서는 장쩌민을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 지도부가 정치 일선에서 퇴진하고, 후진타오(胡錦濤)와 우방궈(吳邦國) 등 60대 전후의 제4세대 지도자들이 당 최고 지도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

○ 당초의 예상과 달리 리루이환(68세)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은퇴한 것은 지도부 세대교체를 바라는 당 내부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

○ 이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의 평균연령이 52.5세로 감소(15차 당대회 대표 평균연령은 53.2세)되었으며, 55세 이하의 당대표자 수는 1,338명으로 전체 당대표의 63.1%를 점유하였음.

- 198명의 중앙위원과 158명의 중앙위 후보위원에 임명된 지도자들의 평균연령은 55.4세였고, 신규로 중앙위원회에 진입한 인사는 180명에 달하였음.
 - 356명의 중앙위원회 정·부위원 모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공산당에 가입한 간부들임.

- 중국공산당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63.4세에서 59.8세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의 평균 연령도 65.4세에서 61.3세로 하향되었음.

- 젊은 전문 기술관료가 대거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으로 발탁되었는 바, 중국 지도부가 연경화·지식화·전문화되었음.
 - 정치국에 진입한 25명의 위원들 모두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엔지니어들임.
 - 2,114명의 전체 당 대표 중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1,943명(92%)에 달하였음.(15차 당대회시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이 83%에 머물렀음)
 - 중앙위원회 정·부위원 중 98.6%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로 충원되었음.

- 한편, 여성간부(27명), 소수민족대표(35명) 그리고 직능대표(33명)도 15기 1중전회 당시보다 많이 중앙위원회에 진출하였음.
 - 당대회 대표에 진출한 여성대표(382명, 18.1%), 소수민족대표

(230명, 10.8%)도 15차 당대회 당시에 비해 각각 1.3%, 0.2% 증가하였음.

2. 집단지도체제 강화

○ 후진타오가 당 서열 1위로 총서기직을 맡게 되었으나, 16기 1중전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9명으로 증가되었다는 점은 중국 공산당이 계속 집단지도체제에 의해서 운용될 것임을 의미함.

- 15차 당대회시에는 7명의 최고지도자들이 당·정·군 요직을 분배하였으나, 앞으로는 9명이 당·정·군 최고 직위를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지도자 한 사람이 당·정·군 요직을 독차지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 그리고 후진타오가 1999년 15기 4중전회에서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임되었으나, 군 경력이 일천하고 군부내에 아직 확고한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라는 점도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임.

- 이번에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에 발탁된 궈보슝(郭伯雄) 정도가 중국 군 지도부내 친후진타오계 인물로 평가됨.
- 중국 군대가 전문화·지식화로 당의 군대로부터 국가의 군대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정치·사회적 혼란 발생 시 군대가 정치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약화시킬 것으

로 예상된다.

- 장쩌민이 현직에 있는 동안 중국은 “장쩌민을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 지도부”라는 정치선전을 강화하였으나, 후진타오가 총서기로 지명된 이후 중국은 “후진타오를 핵심으로 하는 제4세대 지도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국공산당이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시기 권력이 지도자 한 사람에게 집중됨으로써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었는 바,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권력을 장악한 후 중국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음.
- 10기 전인대에서 차기 국무원 총리,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치협상회의 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핵심 권력배분 문제가 확정되는 바, 2003년 3월 이후에나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의 최종 모습이 결정될 것임.
- 이러한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간 권력장악을 위한 이해대립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새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한 9명의 간부들 모두가 기술관료들이기 때문에 지도부간 이념논쟁이 출현할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나, 지도자 개인간 권력강화를 위한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1989년 천안문사건 당시 덩샤오핑(중앙군사위 주석)과 자오즈양(趙紫陽, 총서기)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권력 분산체제 하에서 자오즈양과 덩샤오핑간 갈등이 초래되었음.²⁾

3. 장쩌민의 영향력 지속

○「공청단」을 중심으로 한 후진타오 인맥이 중앙정치 무대에 대거 발탁되었으나, 후진타오가 중국 당·정·군을 확고하게 장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국에서는 우관정, 원자바오(溫家寶), 우방귀, 왕자오궈(王兆國), 궈보슝 등이 후진타오와 지연, 학연, 공통의 경력으로 연결되어 있음.
- 중앙위원회에 진입한 송더푸(宋德福), 리커창(李克強), 두칭린(杜靑林), 리즈룬(李至倫), 왕첸(王晨), 저우창(周強) 등이 후진타오계로 분류될 수 있는 간부들임.

○리펑, 주룽지 등 70대 간부들이 정치 일선에서 모두 퇴진한 가운데 장쩌민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보유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중국 정치무대에서 장쩌민의 발언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2) 1989년 5월 자오즈양은 베이징을 방문한 소련 공산당 서기 고르바초프에게 덩샤오핑이 중국의 최종정책을 결정한다는 ‘내부 비밀사항’을 공개하여 덩샤오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음.

것을 의미함.

- 마오쩌둥시기부터 중국에서는 군부를 장악하는 사람이 중국공산당의 전권을 장악할 수 있었음.
- 1980년대 덩샤오핑의 공식 직함이 부총리에 불과하였으나, 그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군권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로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

○ 장쩌민은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가 결정된 직후 군부와 무장경찰 전체 당대표들과 회동, 군부대에 귀임후 16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군권을 계속 장악할 것임을 강조함.

- 장쩌민의 당중앙군사위 주석직 유임은 아직 군부내 권력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줌으로써 후진타오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³⁾

○ 우방귀, 자칭린, 쩡칭홍, 황쥐, 리장춘 등 장쩌민계로 분류되는 당 간부들이 대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하였다는 점도 향후 중국정치에 대한 장쩌민의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할 것임.

- 이는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독자 계보를 가진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취하도록 할 것임.

3) “江澤民掌軍,利平穩過渡,” 『文匯報』, 2002.11.16.

- 리펑의 지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한 뤼간도 정치국 내에서 세력을 규합하기 어려운 상황임.

○ 비록 수정된 중국공산당 당장에 장쩌민의 이름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3개 대표론』을 당장에 삽입하였다는 점도 중국정치에서 장쩌민의 위상을 대폭 제고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임.

○ 장쩌민의 직계인 쟁칭홍이 ‘태자당’의 대부라는 점에서, 15차 당대회 당시에 비해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진입한 ‘태자당’ 인사들이 증가하였다는 점도 장쩌민의 영향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됨.

- 15차 당대회시 ‘태자당’의 대표격이었던 덩푸광(鄧樸方, 덩샤오핑 장남)과 시진핑(習近平, 習中勳의 아들)이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되었으나,⁴⁾ 이들은 당대표 투표에서 가장 낮은 지지표를 얻었음.

- 16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보시라이(薄一波의 아들), 왕치산(王岐山, 姚依林的 사위), 류연동(劉延東, 류루이룽의 딸), 홍후(洪虎, 洪學智의 아들) 등이 중앙위원회 정위원에 선출되었으며, 천웬(陳元, 陳雲의 아들)과 덩푸광도 후보위원으로 임명되었음.

4)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은 당대표들의 투표에서 많은 수의 지지표를 얻는 인사 순서로 명단이 발표됨.

4. 군 지도부의 중앙진출 확대

○ 15차 당대회시와 마찬가지로 군부 인사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치국에 2명의 군 간부가 진입하는 등 군 지도부의 중앙진출이 확대되었음.

- 군부 인사 몫으로 연로한 장완넨(張萬年)과 츠하오텐(遲浩田)이 물러나고 궈보슝과 차오강촨(曹剛川)이 새로이 정치국 위원에 발탁됨.
- 15차 당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정위원에 진출한 군 간부가 40명에 머물렀으나, 이번에는 44명으로 증원되었음.
- 16차 당대회 대표로 인민해방군 대표 248명이 참가하였고, 11명이 특별초청대표 신분으로 참여함.

○ 현재 총정치부 부주임인 쉬차이호우(徐才厚)가 중국공산당의 일 상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서기처 서기에 발탁된 것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총정치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지도이념을 인민해방군 각 부대에 하달하는 등 정치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임.
- 15차 당대회시에는 총참모장이었던 장완넨이 군 대표로 중앙서기처 서기직을 담당하였음.

○ 군 간부를 중앙정치 무대에 대거 발탁한 것은 군 내부 기반이 취약한 후진타오 지도부에 대한 군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로 평가됨.

Ⅲ. 중국의 대내정책 전망

1. 개혁·개방정책 가속화

- 장쩌민이 정치공작보고에서 경제건설을 위해 개혁·개방 정신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을 천명하고 후진타오도 총서기 임명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는 바, 중국은 앞으로도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중국공산당은 2020년까지 국내생산총액을 2000년 대비 4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인 소강단계’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음.
 - 2010년까지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을 2,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020년까지는 3,000~4,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러한 원대한 발전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신지도부는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성을 가지게 될 것임.
 - 1980년 덩샤오핑은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중국의 최대 국가목표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음.
 - 장쩌민과 후진타오 모두 덩샤오핑에 의해 제3세대와 제4세대

영도 핵심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덩샤오핑이 제시한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정치국과 서기처에 진입한 중국 공산당 신지도부 인사들 대부분이 과학기술 전문가이면서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 온 간부들이라는 점도 경제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

○ 후진타오 지도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처하고, 지역간·계층간 심각한 빈부격차,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초래된 실업자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제개혁 속도를 늦출 수 없을 것임.

- 중국은 도시 실업률이 7% 이상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서부지역 대개발을 통해 낙후된 서부지역 경제를 개선시키려 하고 있음.

○ 이번 당대회에서 17명의 자본가 대표를 당 대표로 참여시키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련샹그룹 회장 장루이민(張瑞敏)을 충원시켰다는 점은 경제발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馬富才(중국천연가스공사 회장), 馬之庚(중국병기그룹 사장), 張慶偉(중국항공우주과기그룹 사장), 劉高偉(중국항공제일그룹 사장), 李毅中(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 회장), 李長印(중국선박중

공업그룹 사장), 周德强(중국전신그룹 사장, 穆占英(중국핵건설그룹 사장), 衛留成(중국해양석유총공사 사장) 등이 당대표로 참여하였음.

2. 중국공산당의 성격 변화 모색

-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당장 수정안이 통과되었는 바, 그 중요한 내용은 “공산당이 생산력 발전을 대표하고, 선진문화 발전을 대표하며,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특히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 발전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은 1978년 경제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온 민간 기업인들을 공산당원으로 충원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임.
 - 민간 자본가들을 중국공산당 내부로 끌어들이므로써 공산당 밖에서 이들이 세력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둠.
- 따라서 이번 당대회는 중국공산당이 단순히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혁명정당에서 민간 기업인을 포함한 전 중국 국민을 대표하는 집권정당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과거 중국공산당은 당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4차에 걸쳐 당 규약을 수정하였음.

○또한 중국공산당 대표 전체가 혁명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신세대라는 점도 중국공산당이 혁명정당의 색채를 완전히 탈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자본가들을 공산당 대표로 충원하였다는 점은 정치엘리트뿐만 아니라 경제엘리트도 공산당 대표가 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기능이 효율화 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또한 사영기업가들을 배척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산당의 지지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

3.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도모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가 가속화됨에 따라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임.

- 특히 중국의 신지도부는 개혁·개방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국유기업 노동자와 농민의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당·정 간부들의 부패문제도 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음.

○중국의 신지도부는 문화대혁명시기 학창시절을 보낸 인사들로서 공산주의 신봉자들인 바, '4항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행정개혁을

통해 당·정의 효율화와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할 것임.

- ‘4항 기본원칙’은 공산당,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사상, 사회주의,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한다는 것임.

○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권한을 강화하고, ‘촌민자치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당·정 간부의 부패소지를 차단하려 할 것임.

- 현재 촌 단위에 국한되어 있는 ‘촌민자치제도’를 현급으로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
- 도시지역에서도 거주민위원회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전면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

○ 1958년에 실시하기 시작한 ‘호구제도’도 1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農民工)문제로 중국의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사회안정 유지차원에서 ‘호구제도’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중국의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구분을 없애고 실제 거주지에 따라 호구를 인정해주는 ‘거주민호구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4. 부정부패 척결 노력 강화

○ 당초의 예상과 달리 청렴한 간부로 알려진 우관정(吳官正) 산둥성 당서기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에 임명된 것은 중국공산당이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16차 당대회 정치공작보고에서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공산당은 자멸할 것이다”고 강조되었다는 점도 중국이 소외되고 있는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부유층과 당 간부의 비리 척결을 강화하여 정치·사회안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됨.

- 중국 국정연구중심은 간부의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중국 국내생산총액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임.

○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최근 중국에서는 당·정 고위지도부의 부정부패 사건이 빈발하여 공산당과 현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음.

- 2000년에는 청커제(成克杰)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이 부패에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았고, 리지조우(李紀周) 공안부 부부장이 샤먼 밀수사건으로 당적을 박탈당하였음.

- 2001년에는 리자팅(李嘉廷) 운남성장 겸 중앙후보위원이 당적을 박탈당하고 무수이신(慕綏新) 심양시장이 뇌물수수과 공금횡령 혐의로 사형되었음.

○ 더욱이 금년에는 리평, 주룽지, 쩡칭홍 등 최고지도부 인사들과

관계가 있는 지도자들까지도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중국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

- 리펑의 측근인 가오옌(高嚴) 국가전력공사 사장이 경제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사법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리펑의 장남인 리샤오용(李小勇)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음.
- 주룽지 총리의 측근 왕쉐빙(王雪冰) 전 중국은행장과 주샤오화(朱小華) 中國光大집단유한공사 회장이 부패에 연루되어 당적을 박탈당하고 15년의 징역형을 받음.

○따라서 중국의 신지도부는 향후 반부패투쟁을 통해 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려 할 것으로 예측됨.

- 공산당기율강화조례, 공산당당원영도간부청렴준칙,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감찰법, 고위간부가족 영업활동규정 등 법제를 강화할 것임.
- 당·정기관과 기업간의 관계를 차단하여 권력부패 발생 소지를 예방할 것임.
- 국가공무원제도, 간부 공개선발제도, 경쟁을 통한 승진제도를 제도화할 것임.

○후진타오 지도부는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부패척결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나, 이 과정에서 과거 부패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아왔던 지도자들과 후진타오 계파간에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15차 당대회 직전에는 장쩌민이 베이징방의 대부였던 천시통 (陳希同)을 숙청하기 위해 반부패 투쟁을 전개하였음.

IV.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1. 후진타오 지도부의 대외정책 성향

- 후진타오는 부패문제, 실업문제, 빈부격차문제 등 산적한 대내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큰 틀의 변화를 추구하기 어려울 것임.

- 장쩌민이 막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기존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 정책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증대될 가능성은 있음.
 - 후진타오가 외교안보문제를 직접 주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장쩌민은 중앙국가안보영도소조, 중앙외사영도소조, 중앙대만영도소조 조장으로서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후진타오 지도부는 중국이 강대국의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국제무대에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인식을 완화하면서 종합국력을 증강시켜 나갈 것임.
 - WTO 시대에 걸맞은 대외무역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화 이미지

를 부각시킬 것임.

- 중국의 신지도부는 실리주의를 중시하는 기술관료이면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편협한 민족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 국가의 실리를 고려하여 대외정책을 결정·집행할 것임.
- 또한 기존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짜오관외교’(造反外交)를 추진함으로써 대외고립을 자초하였던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성장한 세대들이 중국의 최고 권력핵심부에 포진하였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대외정책을 타협과 협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임.
- 중국 신지도부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시기 청장년기를 보낸 세대들이라는 점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정책보다는 점진적·정상적·합리적인 정책을 선호하도록 할 것임.
- 그리고 기술관료들은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기초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후진타오 지도부는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외문제 전문가들과 외교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정책실무 부서의 정책건의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중국의 신지도부가 공산주의 신봉자이며 민족주의자이고 미국 등 외부세계를 상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은 중국 대외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1989년 초 라사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후진타오는 이를 강경 진압하여 덩샤오핑으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았음.
 - 1999년 5월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 발생 직후 후진타오가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는 대국민 연설을 담당하는 바 있음.

2. 대미정책

-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핵심은 미국과 ‘건설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을 완화시키고 미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음.
-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진입한 외교담당 인사들 중 탕자셴(唐家璇) 현 외교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통이라는 점도 향후 중국이 대미정책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우의(吳儀), 류화추(劉華秋), 리자오싱(李肇星), 양제츠(楊潔篪) 등 대미 외교라인이 외교통상부서를 대표하여 중앙위원회에 진출함.
- 중국의 신지도부는 미국이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단계 중국의 최대

목표를 대내 경제발전에 두고 있으므로 가능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임.

- 중국은 미국에 대해 ‘韜光養晦’ 전략을 유지하면서 종합국력을 신장시키려 할 것임.

○ 중국은 미국과 반테러 협력, 군사교류 회복,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영향력 행사, 최고 지도부 교환방문 등을 통해 9·11테러 이후의 미국과의 관계개선 추세를 유지시키려 할 것임.

- 장쩌민 방미시(10.25)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함.
- 미국이 제출한 유엔안보리 대이라크 결의안에 찬성표를 행사함.
- 2003년 초 체니 미국 부통령의 방중이 예정되어 있음.
- 중·미간 국방차관급 회담을 재개(12.9, 워싱턴)하기로 합의된 상태이며, 연내 미국 해군 함정의 중국 해군기지 입항,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중국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음.⁵⁾

○ 미국도 이라크문제와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이 심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장쩌민 방미시 미국은 이라크문제와 북한문제에 직면, 중국에게

5) 2001년 4월 군용기 충돌사건 이후 중·미간 군사교류가 중단되어 왔음.

인권문제와 종교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음.

○향후 중·미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은 대만문제가 될 것이나, 부시 행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고 국제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만에 TMD 체제와 관련된 첨단무기 판매는 자제할 전망이다.

- 최근 미국은 단교후 최초로 대만 국방차관의 국방부 방문을 허용하는 등 대만과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미 의회는 '2003 재정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 대만에 대해 군사무기 판매를 확대하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이 대만독립을 부추기거나 중국을 정치·군사적으로 포위하지 않는 한 중·미관계가 심각한 갈등국면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임.

- 중국의 WTO 가입으로 경제교류·협력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세계 안정유지를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으로 정치·안보관계 개선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과 미국의 TMD 구축정책 등은 중·미관계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남게 될 것임.

3. 대대만정책

- 대만문제 해결이 중국의 3대 국가목표 중의 하나인 바, 후진타오 지도부도 대만의 독립 저지와 ‘1국2제’ 방식을 통해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당분간 장쩌민이 중앙대만영도소조 조장으로서 대만정책을 막후에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국은 ‘1국2제’ 방식을 통한 평화통일 정책을 견지할 것임.
- 16대 정치공작보고에서 대만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할 경우 대만과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였는 바, 대만에 대한 중국의 평화통일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천수이벤(陳水扁) 대만 민진당 정부가 ‘하나의 중국원칙’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통일을 촉진하기보다는 대만독립을 저지하는 데 주력할 것임.
 - 장쩌민은 정치공작보고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불포기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12월초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 시장 선거과정에서 민진당이 독립여론을 조장하여 득표율을 제고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대만에 대해 중국 신지도부는 강경대응을 자제할 전망이다.

- 1995~96년 대대만 미사일 발사와 2000년 대만 총통선거시 대만에 대한 무력위협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임.
- 대만에 무력대응을 할 경우, 후진타오 지도부와 대만 지도부간 관계개선 가능성이 사라지고 대미관계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금년 8월 천수이볜이 '일변일국론'을 제기하였을 때에도 중국은 유연한 자세를 취하였음.

V.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중·북관계 전망

1. 후진타오 지도부의 한반도정책 기초

- 장쩌민이 외교안보문제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향후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보다 중국의 국익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한과도 안보관계 확대를 추구하는 등거리정책을 채택하고, 한국과 경제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할 것임.

2.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 전망

가. 중·북한간 연대관계의 약화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전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공산당에 입당한 간부이며, 한국전에 참전한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실적 국익을 중

시하고 사회주의적 연대관계를 덜 중시할 것임.

○ 특히 1950년대 한국전에 참전하여 북한에 대해 혈맹의식을 가졌던 장만년, 지호전 등 70대 이상의 군 간부들이 모두 현직에서 퇴진하였다는 점은 중·북한간 인적 유대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됨.

- 다만,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파이빙귀(戴炳國)가 외교부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 북한주재 대사를 역임한 차오종화이(喬宗淮)가 외교부 당위원회 서기로 부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북한은 이들을 대중 외교접촉 채널로 적극 활용하려 할 것임.
- 김일성대학 졸업자로서 정치국에 진입한 장더장(張德江)과도 북한은 접촉을 모색하려 할 것임.

○ 정칭홍과 튀간 등 과거 북한 지도부와 비교적 접촉이 많았던 간부들이 대북문제를 주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정칭홍은 2001년 장쩌민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지도부와 광범위하게 접촉한 바 있음.

○ 또한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중국공산당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혁명정당이 아니라 자본가도 핵심 간부로 발탁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집권정당으로 변화되었다는 점도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간의 이념적 연대를 약화시키게 될 것임.

나.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

- 중국의 신지도부는 북한이 중국의 대미관계 개선과 대내 발전 및 안정유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인식할 것임.
 - 장기적으로 중국이 대미 관계와 대남한 관계를 더 중요시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대미, 대일, 대남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자신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간주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국, 대남한, 대일본 관계에서 협상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북한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의 세부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북한 핵문제>

- 지난 10월 25일 부시-짱쩌민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였는 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나, 북한 핵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것임.
-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보유로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고조되면 중국과 미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중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한반도 등 동북아에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제기하여 긴장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북한문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TMD체제 구축을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후진타오 지도부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이 완화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미국과 한국에게 역설할 것임.
- 동시에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음.

- 북한 핵문제가 1994년과 같은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발전된다면, 중국의 신지도부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반대입장을 보다 분명히 할 것임.

<대북 지원문제>

- 대북 중유공급이 중단되고 KEDO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바, 중국은 일단 1994년 북·미 합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임.

- 그러나 만약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 중단된다면, 중국은 미국과 대화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최소한도의 원유와 코크스 지원을 함으로써 미·북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임.

<신의주 특구문제>

- 중국은 북한이 중국 동북3성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임.

- 신의주가 중국내 불법자금 세탁장소, 부패분자 도피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함.
- 신의주가 중국 동북3성과 외자 유치에서 경쟁관계에 서게 될 수 있고, 중국의 자본이 신의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함.
- 특히 신의주 특구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탈세 등 사범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중국내 파룬궁 등 반체제인사들과 연루된 혐의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신의주 특구 개발에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함.⁶⁾

○특히 16차 당대회에서 중국지도부가 부패척결을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 과업으로 강조하였다는 점은 신의주 특구 개발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판단을 심화시킬 것임.

다. 북한의 대중정책

○북한 지도부와 중국 신지도부간에 인적인 유대관계가 약화되게 되었는데, 북한은 중국의 신지도부와 연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도자 방문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북한은 현재 핵문제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핵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일

6) 양빈은 6·4 천안문사건 직후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하였음.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음.

- 김일성과 김정일은 과거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 있음.

○러시아, 일본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과 사전에 이를 협의·통보하지 않고 신의주 특구 지정시에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대중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인 바, 대중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김정일의 방중이 필요한 시점임.

라. 중·북관계 전망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이익차원에서 안보적 협력과 제한적 교류·지원을 통해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나, 쌍방간 연대관계 약화와 중국의 대미국 중시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지지강도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임.

VI. 한국의 정책 고려사항

<중국의 부상에 대한 중장기 대비>

- 중국이 2020년까지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경제력을 증강시킨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바, 중국의 발전에 대한 한국의 장기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금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중국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국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유익한 상대가 될 수 있도록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인적·제도적 관계를 강화해야 함.

<중·북관계 변화에 대한 전략적 사고 필요>

-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중·북관계의 소원화가 한국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지도부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장쩌민과 첸치천 등 기존 중앙외사영도소조 멤버가 중국의 대북 정책 등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중국의 신지도부와 접촉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원로 정치인과의 교류를 유지해야 함.

- 특히 쟁칭홍, 차오종화이(북한대사 역임), 장더장(김일성종합대학 졸업)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조선족문제와 재중 탈북자문제에 대한 신중한 대처>

- 티벳 당서기를 역임한 후진타오가 조선족문제 등 소수민족정책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는 바, 조선족문제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 요구됨.
- 「공청단」 출신으로 후진타오와 가까운 민족사무위원회 주임 겸 중앙위원인 리더주(李德洙)와 접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정일 위원장 방중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회로 활용>

- 김정일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중국채널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강화해야 함.

<중국 외교안보 실무자와 당·정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

-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외교실무 부서와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당·정 연구기관의 정책건의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보이므로, 외교 실무자와 접촉을 강화하고 당·정 연구기관과 국내 국책연구기관간의 교류·협력도 확대해야 함.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대비>

- 차오깡첸 총장비부장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되었다는 점은 중국이 해·공군력 현대화를 적극화 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함.

<무역역조 시정 요구에 대한 사전 대처방안 강구>

- 정치국원으로 승진한 우의가 2003년 3월 중국의 외교담당 부총리에 지명될 것으로 보여 한국에 대해 무역역조 시정요구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의 불가피성에도 사전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